

# 경상남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경 상 남 도  
[ 여 성 가 족 과 ]

#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 영역별 주요과제 목록

분 야	연번	과 제 명	구분
-----	----	-------	----

## 3대 정책영역, 7대 정책과제, 부서별 40개 주요과제

여성정책

① 양성평등 정책 기반 강화 및 문화 확산 (6개 과제)			
여성 정책	A-1	여성친화도시 단계적 확산 및 지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A-2	경상남도 양성평등정책 이행점검 추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기존
	A-3	경상남도 성주류화 제도 내실화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여성 지원	B-1	도민대상 양성평등의식 함양교육 강화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B-2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 및 내실화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B-3	여성리더아카데미 프로그램 개발·확산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②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및 여성의 경력 지속 지원 (6개 과제)			
여성 일자리	C-1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여성 직업교육훈련 강화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C-2	청년여성의 창업 자원(메이커스페이스 등) 연계 지원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C-3	여성 경력 유지를 위한 일·생활 균형 지원체계 구축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C-4	여성 일자리 플랫폼 시스템 구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기존
	C-5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체계 마련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기존
	C-6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기존
③ 젠더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6개 과제)			
여성 권익	D-1	폭력예방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기존
	D-2	디지털 성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면 대응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D-3	시·군별 통합상담소 설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D-4	젠더폭력 상담 연계 매뉴얼 제작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D-5	이주여성 및 장애여성 폭력상담 협업 강화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D-6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지원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분 야	연번	과 제 명	구분
-----	----	-------	----

### 3대 정책영역, 7대 정책과제, 부서별 40개 주요과제

가족정책	④ 모든 가족을 포용하고 지원하는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9개 과제)		
	가족 정책	E-1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E-2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E-3 공동육아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출산 지원	F-1 난임 지원 확대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F-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선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F-3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확대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보육	G-1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기존
		G-2 시간제보육서비스 운영기관 확대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G-3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⑤ 다문화·외국인과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구축 (3개 과제)		
	다문화	H-1 결혼이민자 자립·취업역량 강화 지원 내실화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H-2 다문화가족 가족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H-3 외국인주민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아동청소년정책	⑥ 아동 권리가 존중되는 아동친화 지역 조성 (5개 과제)		
	아동 정책	I-1 경계선지능 보호아동 지원 강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기존
		I-2 아동학대 예방사업 확대 및 전문화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I-3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아동 친화	J-1 경남 돌봄 기초자료 수집·관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기존
		J-2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설치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기존
	⑦ 청소년의 꿈이 실현되는 안전한 환경 조성 (5개 과제)		
	청소년	K-1 청소년 성평등 정책협의체 운영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기존
		K-2 청소년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강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기존
		K-3 청소년 분야 전문가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지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기존
		K-4 청소년의 성인지적 건강권 지원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K-5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

신규사업

기존사업



## ☐ 추진 근거

-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여성친화도시)
- (조례) 「경상남도양성평등기본조례」 제23조(여성친화도시)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남의 성평등 수준 제고 및 여성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장기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경남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현재 경상남도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 여성친화도시 자문단'을 보다 활성화하여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 사업내용

- 지역성평등지수 제고를 위해 여성친화도시 전 시·군 확대 지원
  - 1년에 1~2개씩 여성친화도시 신규 협약 추진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18개 시·군으로 확대
  - 신규 협약 및 재협약 시·군에 대한 전방위적으로 체계적 지원
- 경상남도 여성친화도시 자문단 운영을 통해 광역 단위의 지원 지속 확대
  - 2022년부터 변경된 심사기준에 적합한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 및 추진체계 구축
  - 시·군 특성을 반영한 사업 발굴 및 기존 사업 개선 등 사업전반 지원
  - 추진단계별 필수 이행과제 점검
  - 최종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및 발표자료 컨설팅 등
- 여성친화도시 시민(군민)참여단 활동 활성화 지원
  - 각 시·군 상황에 맞는 시민(군민)참여단 활동프로그램 개발
  - 경상남도 여성친화도시 시민(군민)참여단 만남의 날 운영을 통한 정기적 교류 확대
- 여성친화도시 우수사례 홍보 및 우수 시민(군민)참여단 표창
  - 여성친화도시 우수 대표사업에 대한 자료 공유
  - 여성친화도시 우수 시민(군민)참여단에 대한 표창제도 신설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담당
- 협력부서/ 협력기관 :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및 연구기관, 각 시.군 등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시.군	9개 시.군	10개 시.군	11개 시.군	12개 시.군	13개 시.군

신규사업



기존사업

## □ 추진 근거

-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조례) 「경상남도양성평등기본조례」 제4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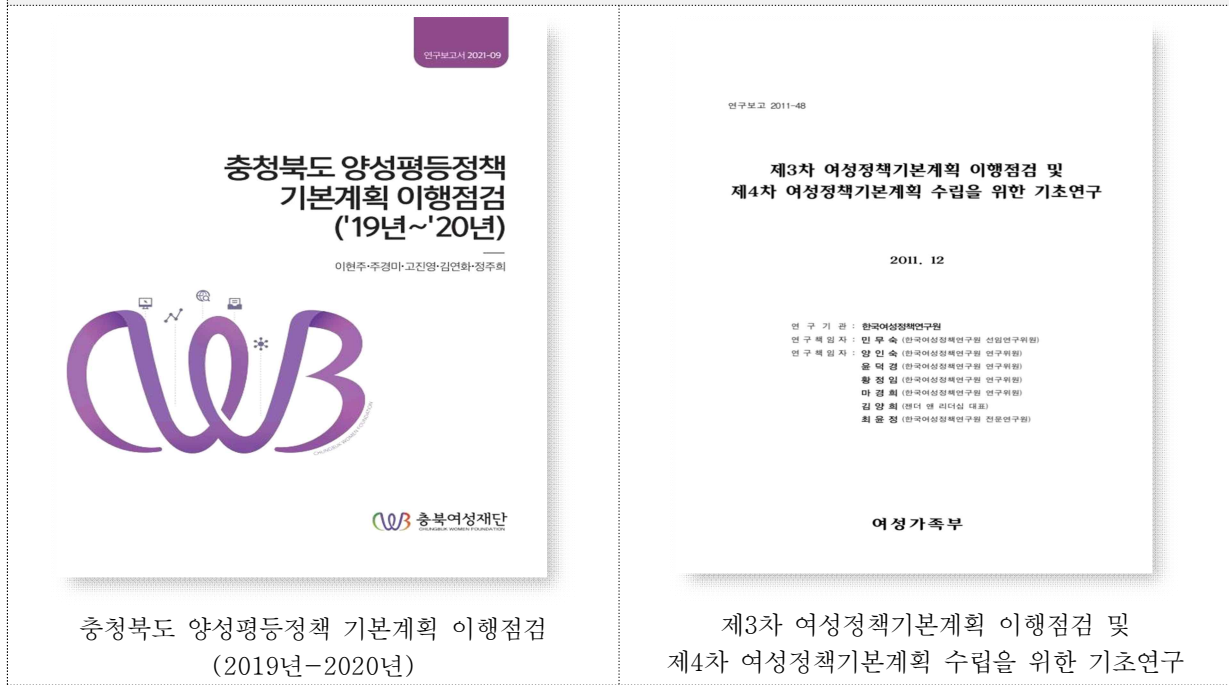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상남도에서는 2018년 최초로 지역의 전문가들과 함께 <제1차 경상남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성과 관리나 이행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음
  - 경상남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전문가 FGI에서도 성과 관리가 안된 부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제2차 경상남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실제 경상남도의 여성가족정책에 반영되어 정책의 효과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이행점검을 제도화해서 성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 있음
-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경상남도에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 경상남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 점검이 이루어져야 함

## □ 사업내용

- 경상남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관리 및 이행점검 실시(연 2회)
  - 매년 수립되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과 연계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 및 성과지표 설정을 통한 성과관리 진행
- 경상남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이행점검 연구 실시
  - 시점: 기본계획 시행 4년차(2026년)
  - 내용: 1년차~3년차 실적에 대한 중간점검 및 향후 정책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

※예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이행점검 사례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담당 및 연계부서
- 협력부서/ 협력기관 :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행점검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중간점검 보고서 작성	-	-	-	연구 시행	-

## ☐ 추진 근거

### ○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14조(성 주류화 조치), 제15조(성별영향평가), 제16조(성인지 예산), 제17조(성인지 통계), 제18조(성인지 교육)
- 「성별영향평가법」 등

### ○ (조례)

- 「경상남도양성평등기본조례」 제5조(성 주류화 조치), 제6조(성별영향평가), 제7조(성인지 예산), 제8조(성인지 통계), 제9조(성인지 교육)
- 「경상남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 ○ (기본계획)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대과제5. 양성평등정책 기반 강화'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상남도 성주류화 제도의 체계적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주류화 제도 전반에 대한 지속 점검을 통해 정책 효과 제고 필요
- 성주류화의 도구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제도,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 ☐ 사업내용

### ○ 성별영향평가 효과성 제고

- 정책개선 이행률 제고: 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에 대한 지속적 이행점검을 통해 정책개선 이행률 제고 노력 필요
- 계획 성별영향평가 체계적 실시: 법령에 의해 3년 이상 주기로 수립하게 돼 있는 경상남도 기본계획을 파악하여 목록화하고, 해당연도에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 특정성별영향평가 성과 추적: 매년 1과제 이상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 성인지예결산 제도 실효성 제고
  - 성인지예결산 추진현황에 대한 분석 연구 매년 시행
  - 성인지예결산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담당자 워크숍 추진
  - 성인지예결산 담당자 및 컨설턴트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
-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통계자료 수집 및 활용도 제고
  - 경상남도 성인지통계 주기적 발행(3년 주기→2년 주기로 변경)
  - 성인지통계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 정책담당자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한 성인지교육 활성화
  - 신규임용 공무원 교육 시 성인지 교육 이수 필수화
  -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및 위탁사업 담당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도민 양성평등교육의 한 분야로 포함하여 연 10회 이상 진행)
-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기능 강화
  - 경상남도 여성가족정책 기초 데이터 축적을 위한 연구 역량강화 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사업 적극 발굴

##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담당
- 협력부서/ 협력기관 : 예산담당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경상남도성별영향평가센터)

##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성인지 통계 발행	-	발행	-	발행	-
대상별 특화 성인지교육 실시	-	연 10회	연 10회	연 15회	연 15회

신규사업

기존사업


☐ 추진 근거

-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양성평등 교육)
- (조례) 「경상남도양성평등기본조례」 제18조(양성평등 의식 제고 등)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민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양성평등 실천 문화 확산
- 지역 젠더갈등 해소
- 경남 지역성평등지수 및 성주류화 정책 추진 환경 개선

☐ 사업내용

- 도민 대상별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강화
  - 생애주기별(유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지원 강화
  - 분야별(농어업인, 경찰, 군인, 사회복지/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등) 지원 강화
- 양성평등 교육 내실화
  -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 활성화
  - 양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담당
- 협력부서/ 협력기관 :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경남성별영향평가센터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생애주기별 양성평등 교육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 개발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 추진 근거

-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
- (조례) 「경상남도양성평등기본조례」 제10조(정책결정과정 참여)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상남도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성별 균형 참여를 통해 성평등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높여 여성 대표성 제고에 성과를 냄
- 그러나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의 양적 성장 이면에는 같은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여성 대표성의 내용적 측면에 내실화가 필요함
- 한편, 경남 18개 시·군의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은 여전히 <양성평등기본법> 권고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 사업내용

-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 관리
  -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비율 40% 이상 유지
  - 시·군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 비율 40% 이상 유지
- 위원회 위촉위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 확대
  - 경상남도 본청 및 18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 수강 확대
  -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활용 가능

※예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양성평등열린교육

**관계로 배우는 양성평등**

무료 | 2시간

신청기간 2023.01.09 ~ 11.30

학습기간 2023.01.09 ~ 11.30

#가스라이팅

• 신청하기

**#With You, 양성평등**

평민재 교육장 세화관

무료 | 4시간

신청기간 2023.01.09 ~ 11.30

학습기간 2023.01.09 ~ 11.30

#성차별 #성인지감수성

• 신청하기

**행복한 조직, 성평등한 사회**

무료 | 4시간

신청기간 2023.01.09 ~ 11.30

학습기간 2023.01.09 ~ 11.30

#조직 다양성

• 신청하기

**문화와 젠더**

무료 | 4시간

신청기간 2023.01.09 ~ 11.30

학습기간 2023.01.09 ~ 11.30

#미디어

• 신청하기

##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담당
- 협력부서/ 협력기관 : 경상남도 본청 전실과, 18개 시·군

##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위원회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 관리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위원회 위촉위원 양성평등 교육	검토	계획수립	시행	시행	시행

## □ 추진 근거

-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23조(정치 참여), 제24조(경제활동 참여), 제27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 (조례) 「경상남도양성평등기본조례」 제12조(정치 참여), 제13조(경제활동 참여), 제22조(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등)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내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은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이 경력을 이어가며 좋은 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여성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함
- 이에 경남여성가족재단은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박지영 외, 2021) 연구를 수행해 지역 청년여성과 재직 여성(중간/고위 관리자)을 대상으로 하는 경남만의 독자적인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화함
- 찾아가는 여성리더아카데미는 경남 청년 및 재직 여성이 수준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여성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경남 여성 대표성의 양적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한편, 여성리더아카데미 전문 강사 양성을 통해 여성 일자리를 창출함

## □ 사업내용

- 여성리더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모듈 개발
  - 경남 여성리더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은 총 17개 모듈로 구성됨
  - 9개 모듈에 대해 표준 교육(안)이 개발되었고, 나머지 8개 모듈에 대한 표준 교육(안)의 순차적 개발이 필요함
- 여성리더아카데미 지역 전문 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 경남 내 여성리더아카데미 전문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 찾아가는 여성리더아카데미 확대
  - 경남의 청년 및 재직 여성(중간/고위 관리자)이 수준 높은 성인지감수성을 가진 여성리더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담당
- 협력부서/ 협력기관 :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교육 프로그램 모듈 개발	-	계획수립	시행	계획수립	시행
전문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시행	-	시행	-	시행
찾아가는 여성리더아카 데미 교육	시행	시행	시행	시행	시행

## □ 추진 근거

### ○ (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직업교육훈련)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 ○ (조례)

-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 사업)
-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제7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 ○ (계획)

-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대과제 3. 다변화되는 일 방식·영역 대응'
- <제4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019~2023)> '대과제 3. 경력개발·이음 확대'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 인적자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여성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는 여성의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이 명시되어 있으며, 경남의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스마트팩토리 도입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공계 여성인력의 직업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환경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경상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도내

이공계 여성 청소년, 청년 여성 지원 및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경상남도는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인력을 육성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더불어, 경남지역의 다양한 산업(농업, 어업, 관광 등)을 4차 산업기술을 연계할 수 있도록 여성 인적자원의 디지털 역량 향상에 관련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도 필요함

## ☐ 사업내용

- 과학기술 분야의 여성 청소년 및 청년 여성 진로 지원
  - 경남지역 여성 청소년 대상으로 과학기술, 이공계 분야의 전공 체험 프로그램 운영
  - 경남지역 여대생 등 청년 여성 대상 과학기술, 이공계 분야 전공 및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여성인력의 역량 강화 지원 산업별 프로그램 개발
  - 디지털 리터러시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고도화된 스마트팩토리 응용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등 스마트 공장 관련 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농업, 어업, 관광 등의 산업에서 신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으로 여성인력 양성 사업 확대

##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일자리파트
- 협력부서/ 협력기관 : 교육인재과/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과학기술 분야 여성 청소년 및 청년여성 진로 지원	계획 검토	계획 수립	프로그램 개발 및 과정 운영	-	과정 운영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여성인력 역량강화 지원 산업별 프로그램 개발	계획 검토	계획 수립	-	프로그램 개발 및 과정 운영	과정 운영



신규사업

기존사업



## ☐ 추진 근거

### ○ (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 ○ (조례)

-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 사업)
-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항 등)
-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5조(청년창업 지원사업)

### ○ (계획)

-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대과제1. 재직 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2023~2027)> '대과제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여성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성의 창업 인프라를 지원하고 창업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여성기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1999년 제정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경남은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9년 제정하고 여성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경제인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상황임
- 특히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경상남도는 민선 8기의 주요 과제로 청년의 창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청년여성 스타트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 및 인프라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필요함

- 특히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내, 메이커 스페이스의 구축 예정으로, 경남 지역의 오프라인 메이커 스페이스 연계뿐 아니라 온라인 창업 플랫폼과의 연계, 예비 청년 여성 창업가, 청년 여성 창업 및 기업가로의 성장 육성을 위하여 인프라, 컨설팅, 창업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청년 여성 창업을 활성화 하기 관련 인프라를 연계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사업내용

- 여성가족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과 창업 자원 연계 지원
  -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내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 공공기관 및 대학 등 도내에 설치된 메이커 스페이스 등 창업 관련 인프라를 연계하여 정보 제공 지원
  - 청년여성 등 여성 창업 확대를 위하여 창업에 대한 지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특화 창업 프로그램 개발 및 과정 운영
  - 메이커 문화 확산 및 창업 시제품 개발 경진대회 사업 추진

##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일자리파트
- 협력부서/ 협력기관 : 창업지원단/ 경남테크노파크

##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경남 여성가족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과 창업 인프라 맵핑 및 서비스 지원	연구 추진 완료	여성가족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및 정보 제공 지원	창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과정 운영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시제품 대회 추진	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시제품 대회 추진

## □ 추진 근거

### ○ (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정책의 수립 등)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 ○ (조례)

-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 사업)
-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제5조(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사업), 제6조(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사업)

### ○ (계획)

-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대과제 1. 재직 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기본계획(2023-2027)> '대과제 2.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 '대과제 3. 중소기업 중심 일·생활 균형 정책 지원'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여성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의 정책적 뒷받침이 중요하다. 2022년 6월, 전부 개정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제15조에는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명시하고 있음.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의 경우 2022년 10월 전부 개정됨에 따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 유지를 강조하고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있음
-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특히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가 2020년 제정되면서,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은 마련한 상황임

- 경상남도는 일과 삶이 조화로운 경남을 구현하기 위해 2022년 11월, 경남도 일·생활 균형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한 상황으로 이와 연계하여 여성이 경력을 유지하면서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됨. 이를 통해 지속적 경제활동의 영위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성평등한 일·생활 균형의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 ☐ 사업내용

- 일·생활 균형 협력체계 활성화 및 정책 지원
  - 경상남도의 일·생활 균형 협력체계와 여성정책과 여성일자리담당을 포함하여 여성의 경력유지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정책 전달 및 협력 생태계 활성화
  - 경남지역 일·생활 균형 정책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분석 등 일·생활 균형 관련 지속적 연구 추진
  -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인력 풀(POOL) 구축 등 컨설팅 사업 추진

##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일자리파트, 사회경제노동과
- 협력부서/ 협력기관 : 일·생활 균형 부서, 경남경영자총협회

##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일·생활 균형 협력체계 활성화 및 정책 지원	계획 검토	일·생활균형 협력체계 구축(간담회) 활성화	일·생활 균형 연구 추진	일·생활 균형 컨설팅 사업	일·생활 균형 컨설팅 사업

## □ 추진 근거

### ○ (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정책의 수립 등)

### ○ (조례)

- 「경상남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 사업)
-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사항 등)
- 「경상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제5조(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사업), 제6조(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사업)

### ○ (계획)

- <제3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2020~2024)> '대과제1.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내실화'
-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2023~2027)> '대과제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 환경 조성'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고용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취업, 창업, 직업교육훈련, 일·생활균형 등 다양한 취·창업 정보의 접근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도입해야 함
- 중앙정부의 워크넷을 기반으로 경상남도 내에는 경남경총이 운영하는 경남 일포유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운영되고 있으나, 여성 맞춤형 일자리 플랫폼으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여성 취·창업지원기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역시 각기 운영되고 있음. 이에 경남의 18개 시·군 여성을 위한 취·창업, 노동 및 일·생활 균형, 직업교육훈련, 경력개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광역의 기능을 하는 여성취·창업 종합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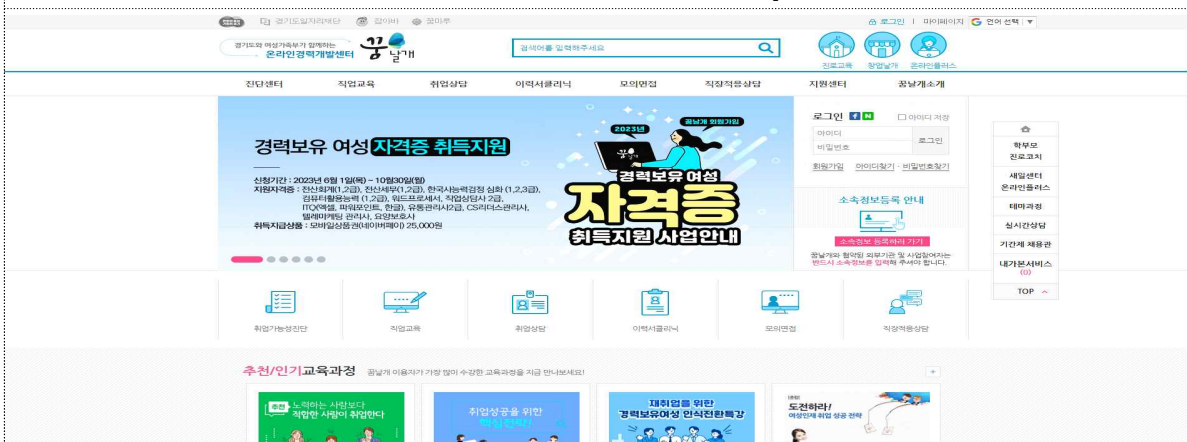
### ○ 여성 일자리 플랫폼 개발

- 오프라인 여성취·창업지원센터의 통합 플랫폼 운영을 위한 협의
- 통합 플랫폼을 통한 경남 18개 시·군의 종합적인 여성 취·창업 정보, 취·창업과 연계된 직업교육훈련 제공 및 경력개발 지원, 유연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연계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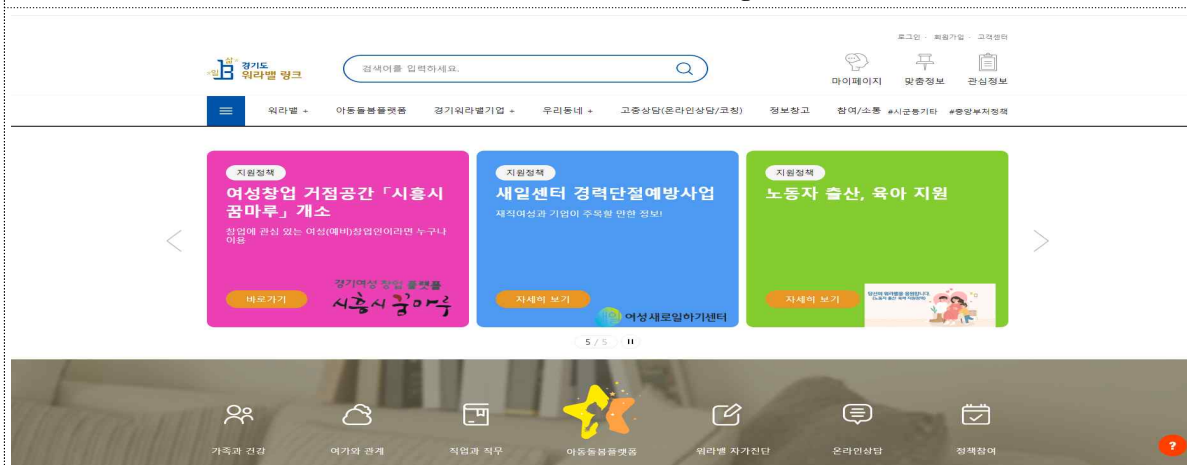
#### ※예시. 여성 일자리 플랫폼 사례



서울시 우먼업 (www.seoulwomanup.or.kr)



경기도 꿈날개 (www.dream.go.kr)



경기도 위라벨 링크 (13b.gg.go.kr)

※예시. 여성 일자리 플랫폼 사례



충북청년여성일자리플랫폼(ccjobdam.com)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일자리파트
- 협력부서/ 협력기관 : 사회경제노동과/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경남여성새로알하기센터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여성 일자리 플랫폼 개발	계획 검토	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및 관계기관 구축 협의	시스템 구축	운영 및 관리

## □ 추진 근거

### ○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38조(여성의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제6조(정책의 수립 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 ○ (조례)

- 「경상남도양성평등기본조례」 제2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13조(경제활동 참여), 제20조(양성평등주간)
- 「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 ○ (계획)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2023~2027)> '대과제 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노동환경이 중요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경상남도양성평등기본조례」 제13조 경제활동참여에서는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3조4항에서는 여성노동자 등의 차별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하지만 경상남도는 여성 일자리 및 일자리, 노동 및 일·생활 균형 등 정책이 분리되어 추진되고 있어, 성평등 노동 연계 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경상남도에서는 노동정책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성인지 관점에서 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계획이나 추진체계의 구성은 부재한 상황임. 타 지자체의 경우 성평등 기본 조례 내, 성평등 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서울의 경우 성평등 기본조례 내 성평등 노동정책 종합계획 및 추진체계 관련 법·제도적 조치 마련



- 또한, 성불평등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성별 임금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필수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경상남도는 노동영역에서의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적임금을 완화 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토대의 마련이 요구됨

\* 서울, 전남, 경기 고양, 경남 창원 등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법·제도적 조치 마련

- 경상남도는 성평등한 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공공부문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시작으로 성별임금격을 해소하고 성평등 노동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 사업내용

-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통합적 정책체계 구축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경상남도 성평등 노동정책계획 연구 수행 추진 및 계획 수립
  -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여성일자리 T/F팀을 확대 운영하여, 주무 및 관련 부서(여성정책과(일자리), 일자리경제과 노사상생과 등) 민간, 학계 및 연구계 등의 협업 추진체계 구성
-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시행
  -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조례) 마련으로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공공기관 및 출차출연기관 등 고용임금 공시제 시행

##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일자리파트, 경제기업과, 사회경제노동과
- 협력부서/ 협력기관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을 위한 통합적 정책체계 구축	계획 검토	계획 수립	연구 추진	성평등 추진체계 운영	성평등 추진체계 운영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성평등고용임금 공시제 시행	연구 추진 완료	계획 검토	법적 근거(조례) 마련	공시제 시행	-

## □ 추진 근거

### ○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38조(여성의날 등과 양성평등주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제6조(정책의 수립 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 ○ (조례)

- 「경상남도양성평등기본조례」 제2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20조(양성평등주간)
- 「경상남도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 ○ (계획)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2023~2027)> '대과제 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성불평등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성별 임금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필수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2020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제38조에 근거하여, 성별 임금 차별 개선 등 노동 분야 양성평등을 촉진하고자 양성평등주간 중 하루를 '양성평등 임금의 날'로 정하였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10조에 따라 양질의 여성 일자리 제고를 위하여 성별임금 격차 축소 등을 포함함으로써 남녀 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추진 중임
- 경상남도 역시 「경상남도양성평등기본조례」 제20조에 따라, 양성평등 주간을 두고 있으나, 경상남도는 노동영역에서의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적임금을 완화 시킬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토대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서울, 전남, 경기 고양, 경남 창원 등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하여 법·제도적 조치 마련

- 경상남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시작으로 성별임금격을 해소하고 성평등 노동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 사업내용

- 경남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시행
  - 성별임금격차를 해소를 위한 경상남도의 공공부문의 임금격차 현황 파악과 개선 계획수립
  - 경상남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마련
  - 성평등개선위원회 마련 및 성평등임금공시제 시행 등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일자리파트, 사회경제노동과
- 협력부서/ 협력기관 : 경상남도의회

##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경남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성평등 고용임금 공시제 시행	연구 추진 완료	조례 마련	공시제 시행	-	공시제 시행

## □ 추진 근거

-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 (조례) 「경상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 제17조(여성폭력 예방교육)
- (기본계획)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대과제 3.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내실화'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폭력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대부분 온라인 교육으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폭력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폭력예방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경남도민 누구나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4대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의 기회로 활용
  - 폭력예방교육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여 직접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제공
- 폭력예방교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폭력예방 강사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폭력예방교육기관에 대한 점검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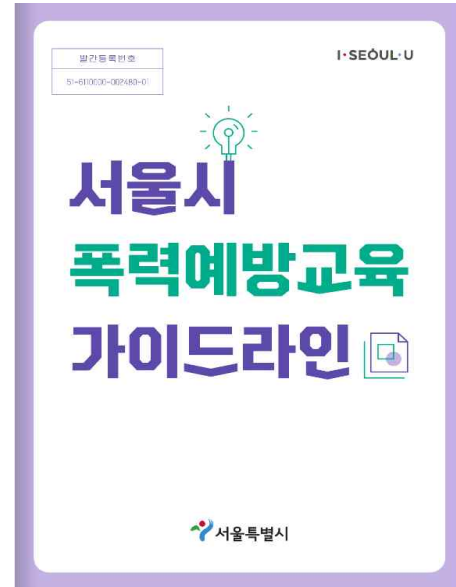
## □ 사업내용

- 폭력예방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도민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경남도청 홈페이지에서 연계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위수탁기관 종사자 대상 폭력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 폭력예방교육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도서벽지, 농어촌 주민,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해, 수요자 특성과 교육환경에 맞는 다양한 폭력예방교육 실시

※예시. 폭력예방교육 통합 플랫폼 사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시 폭력예방교육 가이드라인 제작 (2021)

○ 폭력예방 강사와 폭력예방교육기관의 역량 강화 도모

- 폭력예방강사 대상 양성 및 보수 교육프로그램 운영
- 폭력예방 교육기관의 교육운영 사항과 교육 추진실적 등에 대한 점검 강화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권익담당
- 협력부서/ 협력기관 : 여성복지상담소 시설협의회(상시협) 회원기관 및 폭력 예방교육기관 등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폭력예방교육 통합 플랫폼	-	예산 확보 계획 수립	통합 플랫폼 구축	운영 및 관리	운영 및 관리

신규사업

기존사업



## ☐ 추진 근거

### ○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 (조례) 「경상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 제14조(디지털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

### ○ (기본계획)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대과제 1.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디지털 성범죄가 10~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디지털 성범죄 양상, 피해 규모, 피해자 현황 등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 필요
-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정확한 현황 파악과 함께 중고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처방안 교육 필요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잊혀질 권리'를 직접 지원하기 위해 경남에서도 삭제프로그램 개발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 필요

## ☐ 사업내용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내실화

-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기능 강화: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한 중심 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 강화 필요

### ○ 디지털 성범죄 예방 정책

- 디지털 성범죄 양상 및 피해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경남의 디지털 성범죄 양상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정책연구 진행 필요

-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변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예방·대처교육 강화
-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현황을 통해 일상 속 장난이 성범죄 가해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캠페인 실시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최소화 정책
  - 불법영상물을 직접 삭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체 개발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지원 확대: 촬영물 모니터링 사업 확대, 심리상담 및 의료서비스 등 신체적·정서적 회복 지원 등

##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권익담당
- 협력부서/ 협력기관 : 여성복지상담소 시설협의회(상시협) 회원기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등

##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기능 내실화	-	인력 충원	인력 충원/ 센터 독립	인력 충원/ 센터 운영	인력 충원/ 센터 운영

☐ 추진 근거

- (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5조(피해자 보호·지원)
- (조례) 「경상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 제13조(피해자 보호·지원)
- (기본계획)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대과제 3.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내실화'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남 18개 시·군 중 젠더폭력 관련 상담소가 하나도 없는 시·군은 3개 시·군으로, 상시 지원체계가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3개 시·군에도 상시 지원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 상시 지원체계가 없는 지역은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미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젠더폭력 상담소를 통해 젠더폭력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 있음
- 최근 젠더폭력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교제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이 서로 결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합상담소 형태로 설립·운영될 필요 있음

☐ 사업내용

- 통합상담소 설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3개 시·군에 대해 2년에 1개소 이상 통합상담소 설치하여 18개 모든 시·군에 상시 지원체계 구축 필요
- 통합상담소 설치를 위한 행정적·물적 지원
- 통합상담소 신청 절차 제공, 공간 제공 등 행정적·물적 지원 제공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권익담당
- 협력부서/ 협력기관 : 젠더폭력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통합상담소 지정 지원	-	1개소 추가	-	1개소 추가	-



## ☐ 추진 근거

- (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 (조례) 「경상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 제1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 (기본계획)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대과제 4.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젠더폭력 사건의 피해 최소화 및 가해자 처벌 강화를 위해 젠더폭력 상담 연계 매뉴얼 제작 필요
  - 젠더폭력 사건 발생 시 핫라인 대응시스템(경찰, 1366센터, 상담기관의 합동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자 지원 강화 필요
- 연계 매뉴얼을 통해 젠더폭력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피해자 상황에 적합한 수준의 지원 제공 필요. 또한 젠더폭력 사건 대응 절차와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필요
  - 민-관-경 협의체 운영을 통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필요

## ☐ 사업내용

- 젠더폭력 상담 연계 매뉴얼 제작
  - 젠더폭력 다양한 유형 및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 상담 연계 매뉴얼 제작
  -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연계 대응방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핫라인 대응시스템 숙지 필요
-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 민-관-경 협의체 정례화: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수사기관, 행정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여성폭력 대응 민-관-경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
  - 피해자 지원기관 간 정기적 사례 공유 회의 등을 통해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권익담당
- 협력부서/ 협력기관 : 여성복지상담소 시설협의회(상시협) 회원기관, 경찰,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등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상담 연계 매뉴얼 제작	예산 확보	매뉴얼 제작	수정 및 보강	수정 및 보강	수정 및 보강

## ☐ 추진 근거

- (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9조(여성폭력 예방교육)
- (조례) 「경상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 제17조(여성폭력 예방교육)
- (기본계획)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대과제 3.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내실화'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이주여성 및 장애여성 등 젠더폭력 위험으로부터 더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젠더폭력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기관 간 협업 강화 필요
  - 이주여성의 경우 젠더폭력 초기상담이 주로 이용하는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가족센터에 젠더폭력 상담이 접수되면 바로 전문 상담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협업시스템 구축 필요
  - 장애여성의 경우 젠더폭력의 개념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대처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확대 필요. 또한 젠더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바로 전문 상담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관간 협업시스템 구축 필요
  - 농촌 고령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 대상으로도 젠더폭력 지원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망 구축 필요

## ☐ 사업내용

- 이주여성 젠더폭력 지원시스템 구축
  - 가족센터 종사자 대상 젠더폭력 전문 상담기관 연계 등 폭력 대응 매뉴얼 교육
  - 이주여성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동거가족 등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
  - 이주여성 자조모임 활성화로 폭력위기가정 발굴 및 신속한 개입체계 구축

○ 장애여성 젠더폭력 지원시스템 구축

-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확대 실시
-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숨겨진 여성폭력 피해자 발굴 및 지원 강화
- 장애인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통한 실질적인 보호 및 지원 제공 확대
- 취약계층 여성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시행
- 농촌, 도서, 산간벽지 등 젠더폭력 상담기관으로의 접근이 어려운 여성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시행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권익담당
- 협력부서/ 협력기관 : 여성복지상담소 시설협의회(상시협) 회원기관, 이주여성 지원기관 및 단체, 장애여성 지원기관 및 단체 등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이주여성 젠더폭력 지원	지원시스템 구축	상시 지원	상시 지원	상시 지원	상시 지원
장애여성 젠더폭력 지원	지원시스템 구축	상시 지원	상시 지원	상시 지원	상시 지원

신규사업

기존사업



## ☐ 추진 근거

- (법령)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2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 (조례) 「경상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 제21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 (기본계획)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대과제 4.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젠더폭력 상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복지상담소 시설협의회(상시협) 종사자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종사자 대상 지속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필요
-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소진 방지를 위해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 제공 필요
- 종사자 처우개선, 바우처 제도 시행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필요

## ☐ 사업내용

- 종사자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여성폭력의 양상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한 여성폭력 대응 실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 필요
- 종사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제공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소진 방지프로그램 실시
  - 피해자 상담과정에서 발생한 트라우마 예방 및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 제공
  - 종사자 고충상담프로그램 운영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권익담당
- 협력부서/ 협력기관 : 여성복지상담소 시설협의회(상시협) 회원기관 등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종사자 대상 소진 방지 프로그램 운영	연 2회	연 2회	연 2회	연 2회	연 2회

## □ 추진 근거

-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국가등의 지원),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조례)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5조(지원사업)
- (기본계획)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정부는 매년 이용 아동 및 이용가구 기준, 지원 시간 등의 확대를 추진해 왔음. 경남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양육 공백을 해소하는 공적 돌봄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경남은 아이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와 보수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서비스 접근성이나 서비스 질,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 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이용자의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양육자가 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등하교(원) 시, 아이가 아플 때, 방학 기간을 들 수 있음.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 등하교(원), 아이가 아플 때, 방학 기간 등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등하교(원) 시간대에는 수요가 집중되어 지속적으로 대기가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플 때는 서비스를 미리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이 어려움

- 아이돌봄서비스는 집 이외 장소에서 돌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가 아파 입원했을 때 병원 돌봄이 불가능함
- 어린이집, 학교 등 방학 기간의 경우 하루종일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제대로 식사를 챙겨 먹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이 많음
- 양육자의 다양한 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동돌봄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및 양육자가 체감하는 돌봄 공백, 돌봄 사각 지대에 대한 보완 정책이 필요함

## ☐ 사업내용

- 경남형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주말 및 야간 돌봄 지원 : 주말 및 야간 돌봄 가산 수당 제공
- ② 이용자 대상 서비스 확대
  - 이용자 대상 상담 및 정보 제공 강화
  - 가족센터 연계 이용자 대상 양육프로그램 지원
- ③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 아이돌보미 교육 강화 / 아이돌보미 멘토링 지원 / 아이돌보미 건강관리 지원

##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가족정책담당
- 협력부서/ 협력기관 : 도내 가족센터, 돌봄센터 등

##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보수교육비, 본인부담금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 추진 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 (조례)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 (기본계획)
  -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2.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
  -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2년 기준, 경남의 한부모가구는 90,234가구로 전체 가구의 5.9%를 차지함. 이 중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는 25,140가구이며, 전체 한부모가구 중 저소득한부모가구는 14,609가구로 매년 증가 추세임
  - \* ('19) 12,061(↑484) → ('20) 12,743(↑682) → ('21) 13,651(↑908) → (22) 14,609(↑958)
- 한부모가구는 경제적 여건 및 주거 환경 등이 열악하며, 이혼 후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 받는 비율(22.7%)이 낮아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자녀 돌봄 문제로 취업 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임신·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등 양육, 주거, 경제활동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앙정부는 한부모가족 관련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21.4.21)에 따라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함(('23.4.10)
-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비양육부모 자녀양육 책무성 강화, 한부모 자립 역량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기반 구축의 4대 대과제를 제시함
- 경상남도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음

-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에 대응하여 지방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 수행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강화를 위해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역할을 확대하는 등 경남도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 사업내용

- 「경상남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역할 및 지원 확대
  - 면접교섭서비스 제공
  - 양육, 주거, 의료, 문화, 상담 등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강화
  -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 제공 위한 연계·협력체계 강화
- 한부모 자립 지원
  - 직업훈련비, 자녀 양육비, 주거 지원

##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가족정책담당
- 협력부서/ 협력기관 : 경상남도한부모가족지원센터

##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

## □ 추진 근거

- (법령)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조례) 「경상남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12조(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 (기본계획)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쟁사회에서 타인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은 돌봄 위기를 심화시킴. 돌봄 문제는 가족이나 친척 등 개인적 차원의 노력이나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 사회서비스 차원의 문제로만 해결되지 않음. 상호의존성에 기반하여 돌봄을 주고 받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역량이자 사회적 활동임. 지역사회에서 상호연결된 돌봄체계를 갖추는 것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서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더 케어 컬렉티브, 2021)
- 돌봄 공동체성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함. 육아공동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돌보는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자원을 공유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공공 공간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부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기능을 보완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 등으로 여성의 자녀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가족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공동육아나눔터는 안전한 돌봄활동을 위한 장소제공과 육아정보제공 및 소통 등 정보나눔 기회 제공, 동화구연 등 프로그램 운영, 장난감 및 도서대여, 가족 품앗이 그룹 활동 운영지원 등을 제공함
  - 경남지역에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는 '22년 기준 34개소로 매년 조금씩 확충되고 있음 \* '19년 22개소→'20년 27개소→'21년 31개소→'22년 34개소

- 또한 여성가족부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지역 내 돌봄 역량을 강화하고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3년 기준 전국 19개 시·군·구 지역에 82개 공동체가 발굴되어 활동을 지원 받고 있으나 경남은 참여가 없는 실정임
- 지역 실정에 맞는 공동육아 활성화 위한 지원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선도적으로 육아공동체 지원사업을 추진해옴. 자조모임과 법인, 단체 대상으로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했으나 2022년부터 모임 당 40만원 활동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영유아 및 아동에서 영유아 대상으로 변화함
- 경기도는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을 비중있게 추진하고 있음. 2019년부터 10명이상 주민모임을 대상으로 1억 정도 공간구축비와 사업비를 지원함. 지원 대상은 영유아 및 아동임
- 제주도는 2016년부터 공간을 공유하는 수놓음육아나눔터 조성사업과 돌봄을 나누는 수놓음돌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주민공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 기본공간을 10평 이상 확보하고 최소 5년간 활동계획이 마련된 비영리단체/법인에 5천만원 이내로 지원함
- 전북 익산시는 2020년 익산시마을돌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우리마을돌봄공동체 사업'을 실시함. 10인이상 비영리단체, 주민조직에게 4천만원 정도 공간조성비와 운영비를 3년간 지원함(조미라 외, 2022)

## □ 사업내용

-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 돌봄공동체 구성원 간 육아 나눔, 친목 도모, 정보 공유 등 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 지속 확충
- 돌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 돌봄공동체 활성화 위한 사업추진 계획 수립
  - 시·군 돌봄공동체 발굴·육성 적극 추진
- 경남형 돌봄공동체 활성화 사업 개발
  - 경남형 돌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 : 마을단위 유휴공간 활용하여 공간 구축비, 사업비 등 지원
    - : 이웃, 지인, 마을기관·단체 등 다양한 모임·조직들이 상호지원을 통해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공동체 형성 지원

- : 돌봄공동체에 대해 활동비(운영비) 지원
- 일상·도심형 공동육아 환경조성 사업 추진
  - : 도서관, 미술관, 주민센터, 공원 등 실내·실외 공간에 아이와 양육자가 편하게 휴식하며 돌볼 수 있는 공간 마련(돌봄인력 상주)
  - : 도시재생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 가능

##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가족정책담당
- 협력부서/ 협력기관 : 가족센터

##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5개소	공동육아 나눔터 확충	공동육아 나눔터 확충	공동육아 나눔터 확충	공동육아 나눔터 확충

## □ 추진 근거

### ○ (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 ○ (조례)

-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사업)
- 「경상남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제5조(성 주류화 조치)

### ○ (기본계획)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5.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3-3. 성인지적 건강정책 강화'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난임 진단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1년 기준 난임 진단자수는 25만2천명으로 여성은 64.7%(16만3천명), 남성은 35.3%(8만9천명)를 차지함. 2010년 대비 여성은 1.1배 증가한 반면 남성은 2.6배 증가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2)
- 현행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난임정책은 대상자 및 지원 범위 확대 등 양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대체로 시술비 지원에 편중되어 있고, 이들의 정보권, 건강권, 노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임(김동식 외, 2021). 또한 지자체별로 난임지원 수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난임 진단을 받은 대상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사전에 난임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남의 난임부부지원사업은 난임진단비와 난임시술비, 한의치료가 있음
  - 2020년부터 난임진단비 지원 기준에 사실혼 부부까지 포함됨. 난임진단비는 난임진단검사가 필요한 부부를 대상으로 기초검사에서부터 호르몬검사까지 부부당 20만원 한도에서 1회 지원하고 있음. 난임시술비는 중위소득기준 180% 초과자에 대해 경남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음. 지원 횟수는 2019년 10회

에서 2022년 21회까지 늘어났으며 지원금액도 5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증액 되었음

-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거나 추가 횟수를 지원하고 있음(예: 진주시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과 격려금 지원, 합천군은 진단비 확대 지원)
- 난임지원사업은 정보권, 건강권, 노동권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되어야 하며, 난임예방사업을 강화하고 도민 형성평 제고를 위해 난임치료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난임부부와 임신부의 정서적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난임·우울증상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현재 난임·우울증상상담센터는 중앙을 제외하고 전국에 5개 권역센터\*가 있으나 경남에는 없음
- 난임·우울증상상담센터의 주요사업은 심리상담 및 정서지지 프로그램 운영, 자조 모임, 진료의뢰, 의료비지원, 지역사회연계 등임

<표 VI- > 난임·우울증상상담센터 현황

구분	기관명	수탁기관
중앙	중앙 난임·우울증상상담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지역	인천권역 난임·우울증상상담센터	가천대 길병원
지역	경기도권역 난임·우울증상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지역	경상북도권역 난임·우울증상상담센터	안동의료원
지역	대구권역 난임·우울증상상담센터	경북대학교병원
지역	전남권역 난임·우울증상상담센터	현대여성 아동병원

- 「모자보건법(제11조의4)」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경남지역 난임부부와 임신부의 건강한 삶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경남권역 난임·우울증상상담센터]를 적극 설치할 필요가 있음

## □ 사업내용

- 난임예방 지원사업 추진
-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임신을 계획 중인 사람에게 기초건강검진 지원

- 여자 : 풍진 항체검사, 부인과 초음파, 난소기능검사
- 남자 : 고환검진 및 정액검사
- 공통 : 혈액검사, 간염검사, 갑상선검사, 간/신장기능검사, 소변검사 등

#### ○ 난임시술 지원 확대

- (현재) 난임시술비 지원은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횟수는 체외수정 16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를 지원하고 있음

→ (개선) 도 차원에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및 추가 횟수 지원

#### ○ 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

- 난임 의료기관, 난임 지원사업 등 적극적인 홍보 추진

#### ○ 경남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설치·운영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2조의4)」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①난임시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②그 밖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보육정책과 출산지원파트
- 협력부서/ 협력기관 : 보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경남지역 공공의료 기관 등

###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난임 지원 확대	현행 난임 지원	난임 지원 확대	난임 지원 확대	난임 지원 확대	난임 지원 확대



신규사업

기존사업



## ☐ 추진 근거

### ○ (법령)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 (조례)

-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사업)
-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 「경상남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제5조(성 주류화 조치)

### ○ (기본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5.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06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바우처 사업이며,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음
  -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나 경남은 '22년 8월부터 150%초과 가정으로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도내 전 출산가정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5일~25일까지 이용가능하며,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함
- 경남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23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경남은 분만취약지가 많고, 산후조리시설이 부족한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해 우수한 인력 확보와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서 서비스 관리 및 건강관리사 처우개선 노력이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음

## □ 사업내용

### ○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 (현재) 도는 '22년 8월부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을 소득기준 상관없이 최대 25일간(출산일로부터 60일내 출산가정) 정부지원금 혜택을 받고 내고 건강관리사 방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확대함. '23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은 최대 15일간(출산일로부터 60일내 출산가정) 본인부담금의 90%만 내고 건강관리사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함

→ (개선) 단계적으로 본인부담금 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기간도 점진적으로 확대. 분만취약지의 경우 지원내용을 추가적으로 확대

### ○ 서비스 관리 체계 구축

- (현재) 도내 제공인력 교육기관은 7개소(5개 시), 제공기관은 56개소(12개 시·군)이며, 제공인력은 1,059명임. 신규자 60시간, 경력자 40시간 교육 이수하도록 되어 있음. 현재 서비스 품질관리는 이용자 만족도 평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공기관 자체 만족도 조사, 감독기관 현장조사, 3년 주기 품질평가(보건복지부, 중앙사회서비스원) 실시하고 있음

→ (개선) 서비스 관리 체계 구축. 서비스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기관 선정하여 교육기관 및 제공기관 관리, 제공인력 역량 강화, 서비스 모니터링 등 수행하여 전반적인 질 관리 수행 ex) 서울 서초구의 경우 '서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 도입하여 추가 교육 실시 및 인센티브 제공하여 서비스 질 제고

### ○ 서비스 매뉴얼북 및 동영상 제작·배포

- (현재)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는 시·군·구(보건소) 및 제공기관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영상'을 게시하고 이용(예정)자에게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리플렛'을 배부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개시 전에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리플렛을 열람하도록 당부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기관 홈페이지에 안내 동영상이 게시되어 있는 곳은 찾아보기가 어려움

→ (개선) 경상남도에서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영상과 리플릿'을 활용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권고하고, 모니터링 지표에 포함하여 게시 여부를 평가하도록 함. 동영상과 리플릿을 이용자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필요

○ 건강관리사 처우 개선

- (현재) 제공인력 임금은 "기준(일반)가격"의 75% 이상 지급하고, 제공기관은 서비스 가격의 2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관 관리·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음.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하고 있음(1일 1회, 편도 3km 이상)→ (개선) 경력 수당 신설하여 경력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지침 개정 필요 ex) 아이돌보미의 경우 경력가산 명절상여금 지급

○ 산모·가족 교육 서비스 확대

- (현재) 표준서비스 항목에는 산모건강관리(산모영양, 유방관리, 좌욕지원, 체조 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수유지원,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등), 산모 정보 제공(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교육 등), 가사활동지원(산모식사, 산모신생아 생활공간 청소,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음
- (개선) 산모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 : 서비스 기간 종료 이후 자신 또는 남편, 부모님이 산후조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사의 산후조리 교육 및 정보 전달 역할 강화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보육정책과 출산지원파트
- 협력부서/ 협력기관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관련 기관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존 사업 추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선

신규사업

기존사업



## ☐ 추진 근거

- (법령)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 (조례)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사업)
- (기본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5.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21년 기준 경남의 분만취약지는 A등급 4개소(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B등급 2개소(고성군, 산청군), C등급 6개소(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함안군, 하동군, 거창군)임
- 현재 경남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외래·분만 산부인과, 외래·분만 산부인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①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의령, 산청, 함양) :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여성 대상 산전관리 및 부인과 검진 실시. 군별 월 3~5회 진료. 가임·비가임여성 건강검진, 배우자 건강검진 실시. 해당병원 분만 산모에게 분만진료비(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예정('23년)
- ② 외래·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밀양, 하동, 거창, 합천) : 분만취약지 의료기관에 산부인과 외래 및 분만 산부인과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 밀양시, 하동군, 거창군은 분만 산부인과 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 구입비, 인건비 지원. 합천군은 외래 산부인과 지원
- ③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지원(고성, 함양) : 도비와 시·군비로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역에 외래 산부인과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
- ④ 분만 산부인과 없는 군에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의령, 함안, 창녕, 고성, 산청, 함양, 합천 7개소에 임산부 1인당 10만원 교통비 지원 예정('24년)
- 최근에는 사천시에 대한 분만산부인과 설치 지원 계획을 발표함(경상남도

보도자료, 2023. 4.5). 향후 경남도의 분만취약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모두에 외래·분만 산부인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권역별로는 분만이 가능한 분만산부인과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또한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만취약지에 대해 응급이송체계, 교통지원, 산후조리 지원 등 다각도의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 사업내용

- 출산가구 교통비 지원
  - 임신부 교통비 지원 지역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군 임신부 교통비 지원을 외래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임신부 대상 서비스 실태조사 실시
- 찾아가는 산부인과 지원 확대
  -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지역 확대 / 찾아가는 산부인과 군별 운영 횟수 확대
  -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진 대상 및 내용 확대 : 영유아검진, 산후우울증 검진 등
- 외래·분만 산부인과 지원 확대
  - 외래산부인과 설치 확대
  - 분만산부인과 설치 확대 : 권역별 설치 → 모든 군으로 확대
-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 확대
  - 도내 분만취약지로 지정된 곳은 모두 외래·분만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도비와 시·군비를 활용한 지원 확대
-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원 확대
  - 산후조리원 이용이 쉽지 않은 농촌지역을 위해 본인의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보육정책과 출산지원파트
- 협력부서/ 협력기관 : 식품위생과, 경상남도응급의료지원단,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외래·분만 산부인과 설치 지원	현행 운영	외래·분만 산부인과 설치 확대	외래·분만 산부인과 설치 확대	외래·분만 산부인과 설치 확대	외래·분만 산부인과 설치 확대

## □ 추진 근거

- (법률)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 (조례) 「경상남도 보육 조례」 제9조(보육교직원 근로여건 개선)
- (계획) <경상남도 보육기본계획(2023~2027)> 전략목표 5. 최적의 보육환경 조성, 정책과제 5-1.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세부추진과제 5-1-1.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2021년 12월 기준 경남 보육교직원은 원장 2,350명, 보육교사 15,231명이며,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5.1명으로 전국 평균 5.0명보다 높음. 17개 시도 중 경남은 9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중앙의 4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영아 0세반, 유아 3세반을 대상으로 우선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축소하기로 함
- 경상남도 보육기본계획(2023~2027)에 의하면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전문가 모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보육교사 처우 개선, 전반적인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축소 필요성에 높게 동의함
- 창원시의 경우 2022년 5곳의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창원형 0세아 전담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통해 교사 1인당 0세아 2명을 배치하고 운영함
- 서울시는 2021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만 0세반과 만 3세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는 사업을 시작함. 160개소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만 0세반은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만 3세반은 15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도록 지원함. 2023년에는 400개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예정임. 사업 분석 결과,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의 질이 높아지고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예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 사례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국립어린이집  
국립보육시설

로그인 어린이집 로그인 회원가입 보육교육 안내

홈입점 국립어린이집 서울형 보육 보육서비스 예약 보육정보 보육연

서울형 보육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추진 목표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만3세 만5세 만6세 만7세 아동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사와 아동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보육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 보육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안전사고 예방  
보육교사 업무경감

서울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사업

-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통해 영유아와 보육교사 간 상호작용의 질을 높임으로써 보육의 질 제고와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도모하고자 함. 또한 영유아 인구 수 감소에 따라 보육교사 수도 감소하고 있으므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통해 보육교사 감소 폭을 줄여나감으로써 보육교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의 '표준운영어린이집' 지정 및 시범운영 계획을 기반으로 시행함. 이는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어린이집 공간 개선, 행정 업무 간소화 등 보육환경 질 개선 시범 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계획임. 장애아 혹은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와 같은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개선하는 방안을 실시할 수 있음

## □ 사업내용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표준운영어린이집' 시범사업 실시 및 확대 통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 2023년에 '표준운영어린이집' 관련한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초 분석을 실시함
  - 2024~2025년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 운영 및 운영 모델을 개발함
  - 2026년 이후부터 연차적 확대를 통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함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보육정책과 보육담당
- 협력부서/ 협력기관 : 없음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계획 수립	시범사업 실시	시범 사업 실시	연차적 확대	연차적 확대



## ☐ 추진 근거

- (법률)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시간제보육서비스)
- (조례) 「경상남도 보육 조례」 제5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기본계획) <경상남도 보육기본계획(2023~2027)> 전략목표 3. 가정양육지원 강화, 정책과제 3-1. 시간제보육 활성화, 세부추진과제 3-1-2.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확대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간제보육서비스는 가정양육 부모가 병원 이용, 외출, 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시간단위로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양육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경상남도 보육기본계획(2023~2027) 연구에서 중앙 및 타 지자체 그리고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로 도출한 4가지 방향성 중 부모 양육 지원 확대 영역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방향성을 제시함. 시간제보육서비스에 대한 강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최근 부모들의 시간제보육서비스에 대한 강한 요구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2022년 기준으로 경상남도의 시간제보육서비스는 45개소 46개반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사업 대상은 양육수당 또는 부모급여를 받는 6~36개월 미만의 영아임. 월 80시간 내에서 시간단위로 예약하며,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각 반의 영유아와 함께 담임교사가 보육하도록 함
-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확충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간제보육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가정양육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 ☐ 사업내용

- 시간제보육 제공 어린이집 확대
  - 시간제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하고 이를 거점기관으로 활용함

-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와 교사 수당 및 전담 교사의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함
- 시간제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의 지원 조건 충족 시 운영비를 지원함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보육정책과 보육담당
- 협력부서/ 협력기관 : 없음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시간제보육 제공 어린이집 확대	시간제보육 확대 계획 수립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확대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확대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확대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확대

## ☐ 추진 근거

- (법률)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계획) <경상남도 보육기본계획(2023~2027)> 전략목표 2. 공공보육 확대 및 내실화, 정책과제 2-1. 공공보육 시설 확충, 세부추진과제 2-1-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보건복지부는 2027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목표를 50% 이상으로 설정함. 2022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36.8%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경남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295개소로 전체의 12.5%를 보유하고 있음. 재원아동 수는 78,004명 중에 14,759명으로 18.9%임
-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형어린이집을 포함한 확충률은 2017년 9.95%에서 2021년 19.94%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22년 7월 기준으로 경남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1.5%임. 보건복지부의 50% 목표 실현을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함
- 2012년 대비 2021년 경남의 어린이집 유형별 증감 현황은 가정어린이집 52.1%, 민간어린이집 24.4%, 법인·단체등 14.3%, 사회복지법인 10.8% 감소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영유아 인구 감소로 인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운영난이 심해지고 있음
- 폐원이 많은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그리고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수급 조절과 관리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및 지원이 필요함

## ☐ 사업내용

- 장기임차 및 리모델링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은 장기임차 및 리모델링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장기임차는 기존 민간·가정·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을 지자체가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형태이며,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리모델링 및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임

- 전환 시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에 부합하도록 리모델링비와 근저당비 등을 지원함
  -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동주택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비율이 시군별로 편차가 심해 공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신축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 지역이 아닌 지역에 설립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 구도심과 같이 도내 취약지역에 국·공립 시설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설치를 지원함
- 신규로 조성되는 공동주택 단지에 보육수요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함으로써 생활권별 보육수요 변화에의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보육공백을 최소화함

##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보육정책과 보육담당
- 협력부서/ 협력기관 : 없음

##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장기임차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 추진 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조례)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3조(자활지원)
- (기본계획)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대과제2 결혼이민자 정착주기별 지원'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경상남도는 결혼이민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또, 시·군마다 특수시책으로 자격증 취득반, 취업 기초 소양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대비 기술 교육을 받고 노동시장에서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어 교육-취업 연계성이 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특히, 결혼이민자가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것은 쉽지 않음
- 한편, 도에서는 결혼이민자를 원어민 강사로 양성해 활동 수당을 지급하고, 가족센터 인턴으로 채용하는 등 공공일자리로 일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의 취업 및 경제활동 욕구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교육과 '좋은' 일자리 간의 연계 방안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 사업내용

-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추진
  - 결혼이민자 취·창업 등 경제활동 실태 및 경제활동수요 등의 파악을 위한 정기적인 연구, 조사 등 추진
-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결혼이민자 취·창업 성공사례 발굴·확산과 네트워킹 기회 제공
  - 고용센터, 새일센터 등 도내 취·창업지원 기관과 연계해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창업 훈련, 경진대회, 자금지원, 단계별 멘토링 및 컨설팅, 판로개척 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취·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다문화파트
- 협력부서/ 협력기관 : 여성가족과 여성일자리파트,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제기업과, 창업지원단

##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결혼이민자 경제활동 실태조사 연구	사업검토	계획 수립	연구 추진	-	-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	사업검토/ 계획수립	운영	운영

## □ 추진 근거

###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 (조례)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2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

○ (기본계획)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대과제3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 대상 프로그램은 주로 부부캠프, 가족캠프, 아빠-자녀 활동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의 가족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 수업 방식도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다양한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활동함으로써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 서로와 관계하는 방법에 관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유형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음(이혜림, 2022)

○ 또한, 아직은 일부에 불과하나 일반가족과 함께 가족프로그램에 참여해 활동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접촉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기회의 장에 대한 요구가 있음

○ 이에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수업 방식에 변화를 주며,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일반가정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사업내용

### ○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아동의 권리, 이중언어 교육,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 가족관계, 상호이해 증진 등 다문화가족 내에서 이해와 공감에 필요한 사안에 대한 교육·활동 콘텐츠를 개발, 가족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 교류·소통 프로그램 확대

- 가족센터 내에 정보공유, 취미활동, 상호문화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 간 교류·소통의 기회 확대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다문화파트

○ 협력부서/ 협력기관 : 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 18개 시·군 가족센터, 교육청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사업검토	계획 수립	연구 추진	-	-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운영	시행	시행	사업검토/ 계획수립	운영	운영



## □ 추진 근거

### ○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 ○ (조례)

-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4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제16조(생활 및 법률상담의 제공 등),
- 「경상남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7조(지원범위)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외국인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주민 역시 증가함
- 외국인주민의 법률지원을 위해서는 법률 지식뿐 아니라 외국인주민과 관련한 경험을 비롯한 상호문화인식, 수준 높은 인권 감수성 등이 필요하나, 경남에는 외국인주민이 어려움에 놓였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지원 체계 및 전문가가 부족한 편임
- 이에 젠더폭력, 노동분쟁,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민사소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외국인주민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시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함

### ※예시. 서울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 전문 상담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법률 상담: 월, 수, 금, 일요일 14:00-17:00

(민사, 형사, 가사, 임대차, 소송 등 법적 분쟁, 법률 조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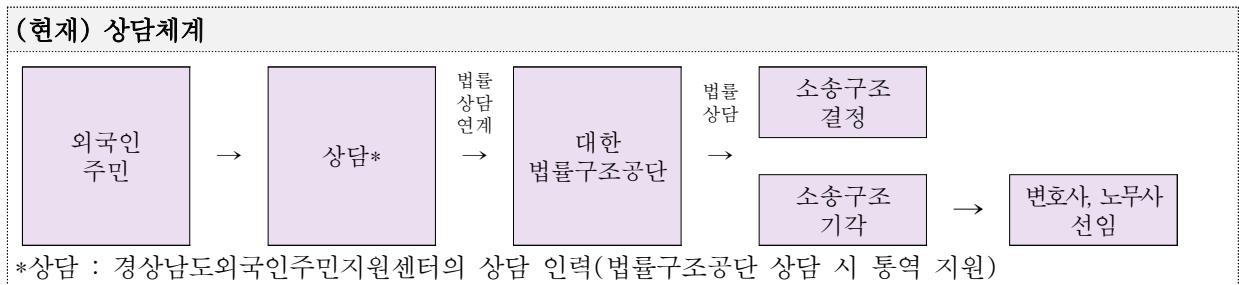
· 노동 상담: 화, 목요일 14:00-17:00

(임금체불, 퇴직금, 산업재해,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

· 문의: 상담운영팀 정성월 ☎ 02-2229-4911 또는 hotline@sfrc.seoul.kr

## □ 사업내용

- 경남 외국인주민 법률지원 실태조사 추진
  - 경남 내 외국인주민의 법률지원 서비스 수요 파악
  - 경남 내 외국인주민의 법률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 외국인주민 법률지원 서비스 전담 협의체 구성
  - (현재) 외국인주민 대상 법률지원은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상담'사업에서 고충, 생활, 가족 영역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음. 상담 인력은 총 8명으로(한국인 2명, 외국인 6명) 7개 언어(한국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영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로 상담을 제공하며, 상담체계는 다음과 같음



- 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구조대상자로 결정되기가 쉽지 않음
- (개선) 경남 내 외국인주민 법률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로 협의체 구성
- 외국인주민 젠더폭력 피해 관련 상담 및 법률지원 강화
  - 결혼이주여성을 비롯한 외국인주민 젠더폭력 피해 관련 상담, 적극적 조치, 및 법률지원 강화
  - 젠더폭력 외에도 생활 속 다양한 사안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다문화파트 및 여성권익담당
- 협력부서/ 협력기관 :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 경상남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18개 시·군 가족센터, 경찰청(외국인 도움센터), 경상남도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1366,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등)

##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경남 외국인주민 법률지원 실태조사	-	사업검토/ 계획수립	시행	-	-
외국인주민 법률지원 서비스 전담 협의체 구성	-	-	사업검토/ 계획수립	시행	시행

## □ 추진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제15조의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 (조례) 「경상남도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아동복지 증진사업)
- (조례) 「경상남도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4(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식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지만, 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전체 중 30% 이상으로 추정됨. 경계선지능 보호아동의 경우 일반 보호아동보다 체계적인 자립지원 및 정서적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는 없음
- 시설의 경우 경계선지능장애 보호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대체로 단기 프로그램에 그치고 있고, 시설 내 경계선지능장애 담당 전문인력이 없음. 그러나 자립에 필요한 8대 영역 기술 학습은 경계선지능장애를 가진 경우 더욱 필요함. 이들의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일상생활 기술 및 사회적 관계형성과 관련된 지원이 지속·확대될 필요가 있음
- 경계선지능아동 돌봄을 전담으로 하는 지원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시설 내 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계선지능 보호아동의 자립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향후 해당 지원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 교육 이수를 필수로하여 경계선지능 보호아동을 전담하여 사례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 사업내용

- 경계선지능 보호아동 전담 사례관리 인력 확보
  - 경계선지능 보호아동의 자립지원 및 사례관리 인력 확보 계획 수립
  - 경계선지능 보호아동의 사례관리가 필요한 양육시설 및 그룹홈 현황 파악

- 경계선지능 보호아동 전담인력과 보호아동 간 연계를 통한 자립 지원 강화
-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 경남자립지원전담기관 내 경계선지능아동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경계선지능 보호아동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보육정책과 아동시설파트
- 협력부서/ 협력기관 :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경남자립지원전담기관

##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경계선지능 보호아동 전담 인력 확보	계획 수립	전담인력 확보(채용), 시설/그룹홈 의 인력 활용 신청	경계선지능 보호아동과 전담인력 간 매칭을 통한 자립지원	경계선지능 보호아동과 전담인력 간 매칭을 통한 자립지원	경계선지능 보호아동과 전담인력 간 매칭을 통한 자립지원
경계선지능아 동지도사 양성교육	-	경남자립지원 전담기관 내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경계선지능아 동 전문인력 양성 강사 확보	경계선지능아 동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경계선지능아 동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 추진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 (조례)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임)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현재 아동정책 관련한 사업들은 대체로 아동학대 예방보다는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그러나 아동정책담당 분야가 나아가고자 하는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사후 대응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 작업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의 종사자가 사례관리를 비롯해 아동학대예방 사업까지 운영하기에는 현장의 어려움이 있음. 이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예방 교육 및 사업이 제 역할을 하기 힘든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일부 광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예방 사업을 담당하는 별도의 아동학대예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이를 확대하고, 전담팀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아동학대 예방 사업은 매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민들의 인식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활성화 및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전문성 확보가 시급함
- 아동학대 예방사업 운영 인력 중 일부는 교육개발 담당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교육 내용을 매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함

## □ 사업내용

- 아동학대 예방 전담팀 확대
  - 아동학대예방 전담팀 확대 운영 계획 수립
  - 아동보호전문기관별로 종사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동학대예방 전담팀을 구성하여 각 기관별로 예방 사업 전담팀을 운영

- 아동학대 예방사업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기관별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개발 담당자 배치
  - 부모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 개발 및 운영 확대
  - 기관별 아동학대예방교육 기반(장소) 구축

##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보육정책과 아동정책파트
- 협력부서/ 협력기관 : 아동보호전문기관

##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아동학대 예방 전담팀 확대		예방사업 전담팀 확대 운영 계획 수립	아동보호전문 기관별 예방사업 전담팀 운영	아동보호전문 기관별 예방사업 전담팀 운영	아동보호전문 기관별 예방사업 전담팀 운영
아동학대 예방사업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	예방사업 전담팀 내 교육 개발 담당자 배치	아동학대 예방교육 확대 실시	아동학대 예방교육 확대 실시

## □ 추진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 (조례) 「경상남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아동학대예방·보호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학대 피해아동에게 의료서비스 및 신체·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있음.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학대를 판단하고 치료하는데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 그러나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은 부족한 상황임. 일례로 지역별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이 선정되어 있지만, 실제 아동학대가 발생하게 되면 인근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음. 또한 전담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아동학대 기관에 관한 이해도는 매우 낮고, 아동학대 관련한 전문 의료교육을 이수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의 역할 강화 및 의무화가 필요함. 현재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에서는 명시된 역할 수행이 잘 되지 않고 있음
-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 내 아동학대전담 의료진 및 시군별 교육을 실시할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경남도에서는 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실적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전담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신속한 진료와 아동의 신체·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사업내용

-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역할 강화 및 의무화
  -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내 아동학대전담 의료진과 시군별 전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담당자를 지정·운영
  - 매년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 하고 경상남도에서는 해당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실적 관리
- 아동학대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 기존의 아동학대 대응 실무협의회에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관련한 전문기관 간의 네트워크 체계 구축

##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보육정책과 아동정책파트
- 협력부서/ 협력기관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강화	-	광역 전담의료기관 역할 강화 계획 수립	광역 전담의료기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광역 전담의료기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광역 전담의료기관 운영계획 수립 및 실적 관리
아동학대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의료기관 포함)	-	아동학대 대응 실무협의회 운영	아동학대 대응 실무협의회 운영	아동학대 대응 실무협의회 운영	아동학대 대응 실무협의회 운영



## ☐ 추진 근거

-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 (조례)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내 돌봄 사업 대다수가 사업 수행을 위한 근거 혹은 기초자료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일례로 지역별 돌봄과 관련된 현황 분석 없이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설치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역사회 돌봄과 관련한 수요·공급 파악이 절실함
- 아동친화 분야 사업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경남 18개 시군별 돌봄 수요와 공급, 그리고 설치된 기관의 역할들을 중심으로 기초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음
- 성인지 통계 구축과 유사한 형태로 해당 부서는 18개 시군별 아동수, 실제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 시군별 돌봄 공급 기관 수, 종사자 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 돌봄과 관련된 기초 데이터를 지역별로 수집하여야 함
- 수집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새로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력 배정이 필요함.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매해 아동친화 분야 사업을 점검하고,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사업내용

- 아동친화 분야 기초자료 수집
  - 18개 시군별 아동 및 돌봄 수요 현황
  - 18개 시군별 돌봄 공급 현황
  - 18개 시군별 돌봄 종사자 현황
  - 18개 시군별 돌봄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아동친화 분야 기초자료 관리
  - 각 분야별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 지정

-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당해 연도 사업 점검 및 차년도 계획 수립
-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아동친화 관련 위원회 운영

##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보육정책과 아동정책파트, 아동시설파트
- 협력부서/ 협력기관 : 없음

##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경남 돌봄 기초자료 수집·관리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관리 지표 계획 수립	자료 수집·관리	자료 수집·관리	자료 수집·관리

## ☐ 추진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초등돌봄 공백 및 돌봄의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초등돌봄의 공백 문제는 여전히 지역 사회 돌봄의 큰 과제임
- 경상남도 여성가족 정책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공적 보호체계 강화 및 아동친화적 지역환경 구축이 중점개선영역(정책 중요도 높으나, 만족도는 낮아 즉각 개선조치가 필요한 분야)으로 나타나, 돌봄의 사회화 기능 강화에 관한 요구도가 높음
- 특히 아동친화적 지역환경 구축의 경우 중요도가 높지만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됨
- '23년 3월부터 전국 20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후 2025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늘봄학교 사업(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교육과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과 연계하여 경남 18개 시군별 돌봄 수요와 공급 현황을 고려한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
- 특히 경남 돌봄 기초자료 수집·관리 사업과 함께 향후 늘봄학교 사업 운영 지역을 고려하여 돌봄 공백 및 사각지대가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지역사회 전반에 균형적으로 돌봄을 공급하여야 함

## ☐ 사업내용

-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설치
  -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설치 계획 수립(돌봄의 수요공급 파악 후 지역별 설치 계획 수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지원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보육정책과 아동시설파트
- 협력부서/ 협력기관 : 없음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설치	-	경남 돌봄 기초자료 및 늘봄학교 사업 계획을 중심으로 돌봄의 수요공급 파악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 □ 추진 근거

- (법률)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 (조례)
  - 「경상남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기능)
  - 「경상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기능)
- (계획)
  -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2023~2027)> '대과제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대과제5.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강화'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정책의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히하여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이 연계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
-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지역단위 맞춤형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청소년정책을 위한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의 성평등 정책 발전과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정책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경상남도는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평등 정책을 포함한 청소년 정책의 중·장기발전 계획이 부재한 상태로,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 사업내용

- 청소년 성평등 정책협의체 운영
  - 성평등 정책의 주요 역할과 기능, 조직 구조뿐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핵

심적으로 추진할 성평등 정책 및 사업 등 논의

- 지역 맞춤형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구축 사업과 연계한 성평등 정책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청소년의 성평등 참여 활동 지원

○ 경남 청소년 발전 종합계획 수립

- 중앙정부의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과 연계하고 경남지역 청소년들의 전반적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 추진
- 경남 청소년의 성장 기회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 성평등 의식 향상 등을 위하여 청소년 대상 종합 발전 계획 수립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담당, 보육정책과 청소년파트
- 협력부서/ 협력기관 : 교육인재과/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청소년 성평등 정책협의체 운영	계획 검토	TF 운영	TF 운영	TF 운영	TF 운영
경남 청소년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	계획 검토	연구 추진 및 계획 수립	계획 시행	계획 시행

## □ 추진 근거

### ○ (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36조(양성평등 교육)
-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 (조례)

-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시행)

### ○ (계획)

-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2023~2027)> '대과제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 '대과제4.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강화'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소년 대상 현재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청과의 논의를 통하여 대상을 확대할 필요 있음. 특히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는 직업과 진로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성별 편견이 없는 진로 선택을 위한 교육적 대안으로 진로 지도의 추진이 필요함. 특히 경남은 제조업 및 남성 중심의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진로선택이 개인의 적성과 자질이 아닌, 사회적 편견과 성별 고정관념에 더욱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이에 경상남도는 여성 청소년의 진로 선택에서의 성별 분리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분업에 대한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음. 즉 경상남도는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 선택과 관련하여 성별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성평등한 관점에서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이 필요함

- 더불어, 인간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나 사상, 문화 등 인문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력과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 필요함. 이에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캠프 등을 추진하여 청소년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성인지 역량을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그리고 경상남도도 대표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성평등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 바 있으나, 도서관을 활용하여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지원 사업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18개 시·군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지자체, 교육청, 사립을 포함) 총 76관을 활용하여 그림책 등을 활용한 성평등 교육으로 건전한 성 가치관 향상과 청소년의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 있음

## □ 사업내용

- 성평등 교육 대상 확대
  -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대상 청소년 성평등 교육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성평등 교육 확대
- 성평등 진로교육 지원 사업 추진
  -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진로 및 직업 선택에서의 성평등인식을 정립하기 위하여 청소년 활동 정책 전달 중심 기관으로 진로교육 표준 강의안 개발 및 보급, 찾아가는 성평등 진로 교육 지원 사업 등 추진

※예시. 청소년 성평등 진로교육 지원 사업 사례

**2023년 젠더와 진로지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양육자 및 기관 담당자 대상 청소년 진로설계지원에서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b>교육대상</b>	경기도 내 초·중등학교 양육자 및 청소년진로체험기관 등 담당자
<b>교육기간</b>	2023.3월~11월
<b>교육비율</b>	전액무료
<b>교육내용 및 시간</b>	<p><b>양육자 대상</b></p> <p><b>2시간</b> 성평등한 진로설계지원을 위한 성인지역량 향상 교육</p> <p><b>3시간</b> 성평등한 진로설계지원을 위한 성인지역량 향상 교육 + 직업에 대한 성별 직종분리의 벽을 뛰어넘은 전문직업인 특강 참여 전문직업인: 경찰, 어린이집 교사, 승무원, 간호사, 국제실업, 김수리 전문가, 경기도 기관사, 메이크업 디자이너</p> <p><b>청소년진로체험기관 담당자</b></p> <p><b>2시간</b> 진로체험 운영 사례 탐구를 통해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진로설계지원 교육</p>
<b>교육신청</b>	링크 접속 또는 QR코드 스캔 <a href="https://naver.me/FhdSbzKO">https://naver.me/FhdSbzKO</a>

문의처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책사업실 성평등문화확산팀 031-220-3939 / rtgntg@qwf.kr



## ※예시. 청소년 성평등 진로교육 지원 사업 사례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와 진로지도 사업'

정책연구 사업운영 키움지원단 아카이빙 열린공간 재단소개
뉴스레터

#### 사업소개

청소년 성평등적 진로지원은 학교 현장의 성평등 진로교육을 확대하고 성인직계 관점에 대한 인식조사, 표준강의안 개발 및 보급, 청소년 성평등 진로캠프 등을 통해 청소년 진로지원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신청하기](#)

#### 주요내용

광주여성가족재단은 광주광역시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 선택에 있어 성별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성평등한 관점에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성평등 진로교육

성평등 진로교육 강사  
역량 강화 워크숍

성평등 진로교육  
표준강의안 개발 및 보급

성평등 진로교육  
캠프 개최

### 광주여성가족재단 '청소년 성평등적 진로지원 사업'

## 2022년 여성가족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 내가 만드는 성평등한 진로가이드북 ·진로에 성평등 더하기

① 성인직계감수성교육 후 ② 진로교재 모니터링 및 ③ 직업인인터뷰를 통해 "성평등한 진로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청소년들의 성평등을 의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입니다.

### 어떤 활동을 할까?

교육	5.15.(일) 13-15시 / 오리엔테이션, 성인직계감수성 교육 / 대면
모니터링 활동	5.16.(월)~5.27.(금) 중 1회 13-15시 / 성역할 고정관념 모니터링(1) / 비대면 5.29.(일) 13-15시 / 성역할 고정관념 모니터링(2) / 대면
인터뷰 활동	6.12.(일) 13-15시 / 인터뷰 설문지 제작 / 대면 6.18.(토) ~ 07.24.(일) 중 1회 / 직업편견을 극복한 직업인 인터뷰 / 대면
평가회	9.4.(일) 13-15시 / 활동평가회 / 대면

### 어떻게 접수할까?

접수기간	2022.04.25(월) ~ 05.08.(일), 선착순 접수
접수방법	화성시청소년수련관(유엔아이센터) 홈페이지 > 로그인 > 통합예약 > 수강신청 > 강좌명 "진로에 성평등더하기" 검색 > 접수하기
참가비	무료
문의	031-267-8851

### 누가? 어디서?

대상	14~16세 청소년 16명
활동장소	화성시청소년수련관 (유엔아이센터), 온라인 ZOOM, 직업채널저

성인직계감수성교육  
모니터링에 따른  
통사시간 지급(4시간)  
활동책자 제작

화성시청소년수련관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진로에 성평등 더하기 사업'

#### ○ 청소년 인문학 캠프 프로그램 추진

- 영화, 음악, 미술, 고전 등 인문학과 성평등을 연계하여 청소년의 인문학적 소양 및 성인직계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문학 캠프 운영
- 청소년 한마음 축제 등의 청소년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에서 인문학과 성평등을 접목한 부스를 운영하여 청소년의 참여 확대

※예시. 청소년 인문학 캠프 사례

**제11회 청소년 인문학 캠프**

# 제주 책In 감

제주시 청소년수련관에어 청소년 인문학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영 일시** 2021년 11월 6일(토), 09:50 ~ 18:00

**운영 장소** 제주시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구분	주제	강사
1차	인문학의 정황	김민정
	라크르에아센다일이 놀자	현영석
2차	제주 책In 무브(제주 도문)	홍로이, 강건모
	제주 책In 퍼블(제주 마을 이야기)	김향숙, 김진숙
3차	제주 책In 펀드(제주 문화유산탐방)	김민수, 한태준
	마음으로 만나는 세상	장성준

**참가 대상** 중, 고등학생 30명 이내

**모집 기간** 2021년 11월 5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접수 마감

**신청방법** 제주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www.jeju.go.kr/youth/main.do](http://www.jeju.go.kr/youth/main.do)  
프로그램에서 신청

**참가비** 무료

**문의** 064-728-1511

※ 여백: 수로 제주시청 별의 수문장 발급  
※ 참가 전 수련관 입구에서 발령 체크 하인후 입장합니다.  
※ 참가 시에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를 두고 신청처에서 협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예방에 따라 행사시 위조증서 발급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 '인문학 캠프'

○ 공공도서관 연계 등 성평등 도서 및 문화 확산 추진

- 경상남도의 지자체, 교육청, 사립 등 총 76관의 공공도서관과 연계하여 성평등 도서를 활용하여 성평등의 가치에 대한 학습하는 사업 추진

※예시. 성평등 도서 사업 사례

**온가족이 함께하는 성평등 이야기**

신청기간 : 2023. 5. 8.(월) ~ 5. 12.(금) 9시부터

- ☑ **운영기간** 2023. 5. 14. ~ 6. 4. (매주 일) 10:00~12:00
- ☑ **참여대상** 가족 15팀 (7~9세 아동 및 보호자)
- ☑ **운영장소** 조천읍도서관 1층 다목적실
- ☑ **참여방법** 공공도서관 홈페이지(<http://lib.jeju.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 **강 의** 이신율(제주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 위원)
- ☑ **운영내용** 성평등 그림책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연계활동을 통해 성평등의 가치를 배움

**check!** 프로그램 참여 시, 아이들과 함께 주제도서를 꼭 읽고 참여하세요



**1차**

**"나다름과 자기표현"**

5월 14. (일) 10:00~12:00

주제도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스타일

활동: 내가 생각하는 나의 스타일 만들기

**2차**

**"다양성과 존중"**

5월 21. (일) 10:00~12:00

주제도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스타일

활동: 내가 생각하는 나의 스타일 만들기

**3차**

**"일의 세계"**

5월 28. (일) 10:00~12:00

주제도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스타일

활동: 내가 생각하는 나의 스타일 만들기

**4차**

**"안전"**

6월 4. (일) 10:00~12:00

주제도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스타일

활동: 내가 생각하는 나의 스타일 만들기

**조천읍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온가족이 함께하는 성평등 이야기'

##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담당, 보육정책과 청소년파트
- 협력부서/ 협력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청소년 성평등 교육 지원 확대	계획 검토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성평등 교육 확대	성평등 교육 확대	성평등 교육 확대
성평등 진로교육 지원 추진	계획 검토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성평등 진로지도 표준 교안 등 개발	진로 지도 지원 사업 시행	진로 지도 지원 사업 시행
청소년 인문학 캠프 및 성평등 도서 문화 확산 프로그램	계획 검토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 ☐ 추진 근거

### ○ (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36조(양성평등 교육)
-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 (조례)

- 「경상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 「경상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시행)

### ○ (계획)

-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2023~2027)> '대과제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 '대과제4.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강화'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성평등 교육 활성화가 강화되어야 함. 가정이나 학교, 사회에서 나타나는 남녀편견 및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함
-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2023~2027) 등에 근거하여, 양성평등한 성장 환경 조성에 대해 강조되고 있어 양성평등 교육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성평등 의식 및 문화를 확산하고자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청소년 분야 전문가,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의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은 다소 낮은 상황으로 경상남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의 확대 및 내실화가 요구됨

☐ 사업내용

○ 청소년 분야 전문가의 성평등 교육 확대

- 청소년과의 상호작용이 많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활동가,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지도자 지원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증진 지원 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여 성평등 의식과 함께 성평등 관련 전문성 및 역량 향상 도모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보육정책과 청소년파트, 여성가족과 여성정책담당
- 협력부서/ 협력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청소년 지도사 등 성평등 교육 지원 확대	계획 검토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성평등 교육 확대	성평등 교육 확대	성평등 교육 확대

## □ 추진 근거

### ○ (법률)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 ○ (조례)

- 「경상남도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 ○ (계획)

-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23)> '대과제5.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 <제4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2021~2025)> '대과제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2023~2027)> '대과제3.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대과제4.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강화'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 2023)내 성별지표 확대, 제4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2021~ 2025)에 성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정책 포함, 제3차 양성평등기본계획(2023~2027)에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에 대해 강조하면서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 청소년 대상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도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건강 및 생활 지원이 강조되었음
- 특히 「경상남도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또한 「경상남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나, 보편적 지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청소년의 성인지적 성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가치관 정립을 지원하기 위한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함. 현재, 경남의 이동형 성문화센터가 있으나, 18개 시·군 내 청소년 수련관 등을 성문화 체험관 운영 등의 지원이 중요하다 할 수 있음
- 이에 경상남도는 청소년 시기에 성인지적 건강권을 보장하여 균형 있는 성장 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을 확대하여 청소년의 성·재생산 건강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 사업내용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 저소득층 청소년에서 전 청소년(학교밖 청소년 포함)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여 월경 건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
- 청소년 성문화 체험 확대 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성문화 체험의 확대를 위하여 디지털 청소년 성문화 콘텐츠 제작, 청소년 성문화센터 권역별 설치 확대 운영 등을 통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에 대한 교육 지원

##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보육정책과 청소년파트
- 협력부서/ 협력기관 : 보건행정과/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계획 검토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사업 실시	사업 실시	사업 실시
청소년 성문화 체험 확대 지원	계획 검토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디지털 청소년 성문화 콘텐츠 제작	디지털 청소년 성문화 콘텐츠 운영	체험관 설치 (권역별)



## □ 추진 근거

-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조례) 「경상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 (계획)
  -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2023~2027)> '대과제3.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대과제3.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확대'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경상남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의 제8조2항에서 아동·청소년에 관련 내용을 담고 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 서울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 특히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에서 디지털 영역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양적으로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도 청소년의 범죄 예방 및 회복 지원이 강조되었음
-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경상남도는 청소년 대상 유해환경, 디지털 성범죄 등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즉 경상남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해환경 및 성범죄가 다변화되고 이에 따른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 사업내용

-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 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안과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 추진
  - 청소년 성착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례 및 지원대책 마련
-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협력 강화
  - 청소년 유해환경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연계 모니터링 추진
  - 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신속히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경·연 협력의 지속적 강화

## □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보육정책과 청소년파트
- 협력부서/ 협력기관 : 여성정책과 여성권익담당,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정책과/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경남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 □ 연도별 추진계획

사업명 (성과지표)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계획 검토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연구 추진	조례 마련	대책 마련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 및 협력 강화	계획 검토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모니터링 추진	모니터링 추진	모니터링 추진
			민·관·경·연 협업 정례회의 등 활성화	민·관·경·연 협업 정례회의 등 활성화	민·관·경·연 협업 정례회의 등 활성화